

# 의정소식

구민 복리 증진과 복구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발로 뛰며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2023년 하반기

제 31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http://council.bukgu.ulsan.kr>



# CONTENTS

ULSAN BUK-GU COUNCIL NEWSLETTER



- 04 발간사
- 05 의원현황 및 정수
- 06 북구의회 연혁 및 조직
- 07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안건처리 현황
- 08 주요의정활동
  - 제213회 임시회
  - 제214회 임시회
  - 제215회 정례회
  - 상임위원회 활동
  - 의원 연구단체 활동
- 17 주요 안건처리 현황
- 21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 2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 26 현장 속으로
- 29 결의안, 구정질문, 서면질문, 5분 자유발언
- 48 2023년도 하반기 포토의정



표지설명 | 동천천 어도의 봄날  
(조재철, 북구 관광사진전 수상작)

발행일 | 2023년 하반기, 제31호  
발행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편집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회사무과장  
발행처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회사무과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연암동)  
전화 | 052)241-8971~8976  
홈페이지 | <http://council.bukgu.ulsan.kr>

뉘시공원 요트계류장의 아침여명(김정환, 북구 관광사진전 수상작)



사랑하는 울산 북구 주민 여러분! 2024년 갑진년 희망찬 새해가 힘차게 밝았습니다.

한 해를 새로 시작하며 구민 여러분 모두의 바람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제8대 북구의회가 출범한 지 벌써 1년 6개월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북구의회는 ‘구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를 기조로 북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책지원관을 추가 채용하여 전문성 제고와 의정활동의 다각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총 6회의 정례회와 임시회를 통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의회는 지역의 변화와 발전에 발맞춰, 투명하고 공정하게 북구 구정이 운영되도록 주민 대의기관으로서 오로지 구민을 위한 의정 활동을 펼칠 것입니다.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면서 민생경제를 챙기고, 구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합니다.

올해는 강력한 용기와 힘을 상징하는 ‘푸른 용의 해’라고 합니다.

우리 의회는 올 한 해에도 청룡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지혜와 용기로 북구가 한 발 더 힘차게 도약하는 데 있어 주춧돌이 되도록 의원 개개인의 모든 역량을 다해 구민들에게 헌신하겠습니다.

새해 우리 북구 주민 모두에게 평안과 만복이 깃들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김정희**

▣ 제8대 [전반기] 북구의회 의원현황



**의 장**  
 성 명 김 정 희  
 연락처 010-3469-1522  
 선거구 농소1·송정동



**부 의 장**  
 성 명 이 선 경  
 연락처 010-8545-0266  
 선거구 농소 2·3동



**의회운영위원장**  
 성 명 박 정 환  
 연락처 010-9359-8572  
 선거구 농소 2·3동



**행정자치위원장**  
 성 명 박 재 완  
 연락처 010-9697-7139  
 선거구 농소1·송정동



**복지건설위원장**  
 성 명 조 문 경  
 연락처 010-5232-4625  
 선거구 비례대표



**의 원**  
 성 명 김 상 태  
 연락처 010-3854-1103  
 선거구 농소 2·3동



**의 원**  
 성 명 강 진 희  
 연락처 010-8610-4748  
 선거구 강동·효문·양정·염포동



**의 원**  
 성 명 손 옥 선  
 연락처 010-7760-6745  
 선거구 강동·효문·양정·염포동



**의 원**  
 성 명 임 채 오  
 연락처 010-4844-5405  
 선거구 강동·효문·양정·염포동

▣ 의원정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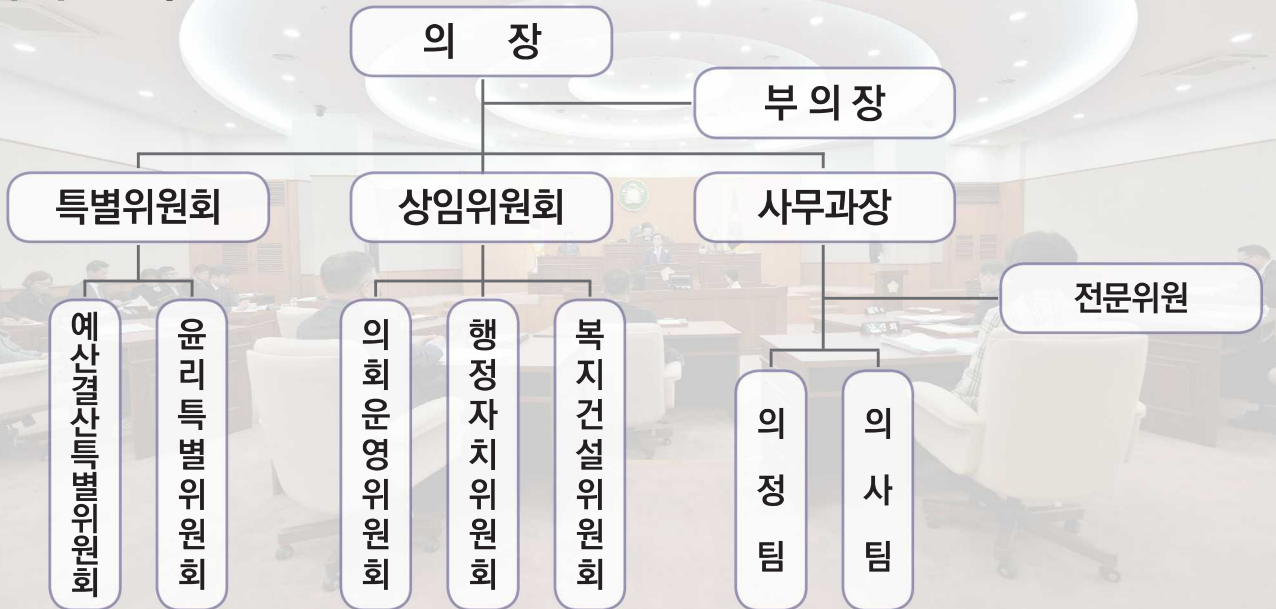
계	가선거구 (농소1·송정동)	나선거구 (농소2·농소3동)	다선거구 (강동·효문·양정·염포동)	비례대표
9	2	3	3	1

□ 울산광역시 승격 및 북구의회 설치



- 1997. 7. 15 초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7명)
- 1998. 3. 1 동구 염포동 선거구 북구 편입(8명)
- 1998. 6. 4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1998. 7. 7 제2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8명)
- 2000. 2. 21 송정동의원 사직(7명)
- 2000. 6. 8 송정동의원 보궐선거(8명)
- 2002. 6. 13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2002. 7. 9 제3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8명)
- 2006. 5. 31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 2006. 7. 3 제4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7명)
- 2010. 6. 2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 2010. 7. 1 제5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7명)  
- 임기 : 2010. 7. 1. ~ 2014. 6. 30.
-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 2014. 7. 1 제6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7명)  
- 임기 : 2014. 7. 1. ~ 2018. 6. 30.
-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 2018. 7. 1 제7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8명)  
임기 : 2018. 7. 1. ~ 2022. 6. 30.
- 2020. 1. 15 농소1·강동·송정동의원 사직(7명)
- 2020. 4. 15 농소1·강동·송정동의원 보궐선거(8명)
- 2022. 6. 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 2022. 7. 1 제8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9명)  
- 임기 : 2022. 7. 1. ~ 2026. 6. 30.

□ 의회 조직





회기운영 현황(2023. 7. 1. ~ 12. 31.)

구분	계		임시회		정례회	
	회수	일수	회수	일수	회수	일수
2023년 하반기	3	50	2	18	1	32

안건처리 현황

회수	일수	계	예산안	결산	조례안	동의안	결의안	보고	질문	5분 자유발언	기타
제213회 (2023.08.29.~09.12.)	15	24	1	0	7	0	1	0	2	5	8
제214회 (2023.10.11.~10.13.)	3	14	0	0	4	1	1	1	0	3	4
제215회 (2023.11.20.~12.21.)	32	47	4	0	14	1	3	3	1	9	12
합계	50	85	5	0	25	2	5	4	3	17	24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13회 || 임시회 2023. 8. 29. ~ 9. 12. (15일간)

울산북구의회가 8월 29일부터 9월 12일까지 15일간 ‘제213회 임시회’를 열고 북구청이 편성한 5406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북구는 이번 임시회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 5천125억1천390만원 보다 280억4천222만원 증액한 5천405억 5천612만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다.

이에 북구의회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안을 심사한 뒤 회기 마지막 날인 12일 본회의에서 조례안 등의 안건과 함께 종합 심의 의결했다.

북구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개정안(박정환 의원 발의)과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상태 의원 발의), 북구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개정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해 가결했다.

아울러 김상태 의원을 대표로, 이선경, 박재완, 임채오, 강진희 의원이 함께 발의한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이의 없이 채택했다.

박재완 의원은 2차 본회의에서 ‘인구 소멸에 대한 북구의 대응 방안에 관하여’란 주제로 박천동 구청장에게 구정질문을 했다.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14회 || 임시회 2023. 10. 11. ~ 10. 13. (3일간)

울산북구의회가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제214회 임시회'를 열어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하면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확정했다.

행감 일정 확정에 따라 북구의회는 '제215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북구청 각 국 및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시설관리공단, 보건소, 의회사무과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북구의회는 이번 행감을 앞두고 감사 대상 기관 및 부서 총 30곳에 대해 지난해 대비 8건 증가한 총 524건의 감사 자료를 요구했다.

북구의회는 이번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는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2차 본회의에서는 북구청이 제출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 폐기물처리 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박재완 의원은 'KTX-이음, 반드시 북울산역에 유치되어야 합니다'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15회 || 정례회 2023. 11. 20. ~ 12. 21. (32일간)

울산북구의회가 11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32일간 '제215회 2차 정례회'를 열고 4천845억원 규모의 2024년 복구 당초예산을 확정했다.

북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4일부터 11일까지 복구청 각 부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펼쳤다.

이어 12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심사를 진행했고 13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북구의회는 또 14일부터 19일까지 심사한 5천471억원 규모의 제3회 추경안을 21일 열린 3차 본회의에서 원안과 같이 의결했다.

3차 본회의에서는 또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가 채택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도 심의 의결했다.

이밖에 이번 정례회에서는 박재완 의원을 대표로, 김정희, 이선경, 김상태, 임채오 의원이 함께 발의한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전액 삭감 규탄 및 편성 촉구 결의안'을 반대 의견 없이 채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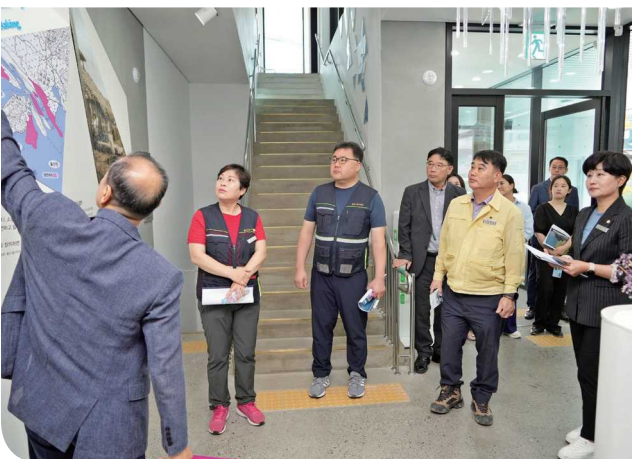
아울러 이선경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정희, 박재완, 임채오, 김상태 의원이 공동 발의한 '메가시티 서울, 서울 광역화 반대 결의안'을 이의 없이 채택했다.

##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정환)는 하반기 제213회부터 215회까지의 임시회 및 정례회에서 모두 8차례의 회의를 열어 17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재완)는 하반기 제213회부터 215회까지의 임시회 및 정례회에서 모두 22차례의 회의를 열어 2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현장방문활동으로 북구예술창작소 소금나루 2014와 소금포역사관, 북구생활문화센터를 찾아 현안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

## 복지건설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조문경)는 하반기 제213회부터 215회까지의 임시회 및 정례회에서 모두 22차례의 회의를 열어 19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현장방문활동으로 중산동 1166-1 일원 '천걸음 이화정마을 도시 재생사업' 대상지를 찾아 도로와 주차장, 보행길 등을 둘러봤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하반기 제213회부터 215회까지의 임시회 및 정례회에서 모두 5차례의 회의를 열어 9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의원 연구단체 활동

단체명	연구참여자(4명)	연구주제
민주의정	대표의원 임채오 참여의원 이선경, 김상태, 박재완	무룡산을 중심으로 한 관광인프라 구축 방안



무룡산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현지조사 실시

무룡산과 유사한 환경의 산림을 이용한 개발사례, 천문대, 케이블카 등의 랜드마크, 지역이 보유한 기존 문화자원과의 연계 사례 등을 조사하기 위해 8월과 9월에 진주시, 통영시, 김해시에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무룡산 역사를 바탕으로 한 관광콘텐츠 연계 전문가 특강 개최

무룡산이 가진 역사를 관광 인프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1월 6일 의회 다목적실에서 이정호 전 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을 강사로 초청해 '무룡산 역사를 바탕으로 한 관광콘텐츠 연계'를 주제로 전문가 특강을 개최했다.

단체명	연구참여자(5명)	연구주제
지역균형발전연구회	대표의원 임채오 참여의원 김정희, 이선경, 박재완, 김상태	최근 감소하는 인구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정책 수립



울산 복구 인구증가 정책 포럼 실시

'지역균형발전연구회'는 11월 16일, 복구평생학습관 학습누리터에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주관으로 울산 복구 인구증가 정책 포럼을 개최하여 인구 감소 원인을 규명하고 지역 맞춤형 인구 유입 정책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울산 복구 인구증가 정책 개발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지역균형발전연구회'는 지역 맞춤형 인구 유입 정책 방안으로 공공 시설의 결혼예식장 지원, 24시간 영유아 돌봄 운영체계 구축, 낙후도심 재개발, 명문중·고등학교 육성, 도로망 확충 등 7개 추진사업을 도출하며 연구용역을 마무리했다.

의원 연구단체 활동

단체명	연구참여자(3명)	연구주제
소통으로 행복한 북구 만들기	대표의원 박정환 참여의원 조문경, 손옥선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의사소통 및 대화 방법 연구



진정성 있는 정치를 위한 첫걸음으로  
스피치 강의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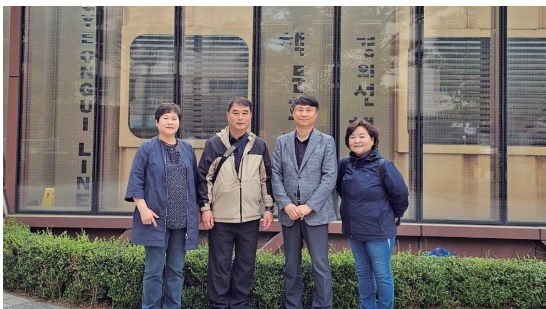
소통으로 행복한 북구 만들기 연구 모임(소행복)은 행복하고 살기 좋은 북구 만들기를 목적으로 글꽃소리연구소 유서희 소장으로부터 정치가를 위한 스피치와 이미지 메이킹, 소통방법 등 모두 12차에 걸쳐 강의를 받았다.



의원들의 소통 역량 진단을 위한  
주민 토론회 및 소통간담회 실시

‘소행복’은 주민들을 초청해 그간의 교육 과정과 성과를 공유하고 북구의 현안을 주제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소통 간담회를 8월과 10월, 2차에 걸쳐 실시하여 의원들의 소통 역량을 강화했다.

단체명	연구참여자(4명)	연구주제
울산 북구 조례발전연구회	대표의원 조문경 참여의원 박정환, 강진희, 손옥선	울산 북구 발전을 위한 조례정비 방안



우리 구 특성을 반영한 조례 발굴을 위해  
경의선 숲길 등 우수사례 벤치마킹

‘울산 북구 조례발전연구회’는 10월에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사업의 우수사례인 경의선 숲길과 서초구 1인가구지원센터 등을 견학하고 우리 구 특성을 반영한 조례를 발굴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조례 정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의회의 입법 기능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출범한 ‘울산 북구 조례발전연구회’는 제정안 26건, 개정안 39건 총 65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발굴하며 조례 정비 연구용역을 마무리했다.

## 제213회

## 임시회 주요 안건처리 현황

-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울산광역시 복구 10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한 「행정기본법」 및 「민법」의 개정에 따라 만 나이 규정을 일괄 개정하여 법체계의 통일성 도모하고 입법절차의 경제성을 높이고자 함.
- **울산광역시 복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청년의 폭넓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청년의 연령을 확대하고 청년정책위원회의 구성을 정비하고자 함.
-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울산광역시 복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울산광역시 복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사회적 배려 대상인 등록 장애인, 한부모 가족, 다자녀 가정에 대하여는 수수료 감면 규정이 없어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복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상위법령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 지명위원회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복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상위 법령인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개정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소속기관명을 현행화하고, 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와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 조직 및 운영을 명확히 구분하고,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체적인 구성 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농소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의견없음**
  - \* 「2025년 울산광역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복구 호계동 831-2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농소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하고 2023년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 신청하고자 하며, 공모사업 신청 전에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농소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복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상위 법령인 「지역보건법」 제34조가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울산 지역 내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을 통일하여 보건행정의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함.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 \*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함.

### 제214회

### 임시회 주요 안건처리 현황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위원회 위원 자격, 위원회 심의 방법 등 상위 법령(행정안전부 예규)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정비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 12. 31.자로 종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안정적인 의료급여사업을 도모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상위 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안전관리 시설 설치 규정을 반영하고, 개방화장실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등 구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상위 법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 12. 31.자로 종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함.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 보고완료**
  - \* 장기미집행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전체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보고하고자 함.

### 제215회

### 제2차 정례회 주요 안건처리 현황

- **울산광역시 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 원안가결**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 인구정책방향을 규정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현재 비상설로 규정되어 있는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사전심의 및 활용 등 정책연구용역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자 함.
-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가재골 공원조성 및 테마어린이 놀이시설 건립’에 대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의결을 얻고자 함.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 ▶ 원안가결**
  - \* 2024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기획재정부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그 의결을 얻기 위함임.
-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쇠부리축제 추진위원회 구성 시 안전분야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하고, 안전관리계획 수립·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축제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추진을 통해 청소년의 지역 사회 생활에 필요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적·효율적·안정적으로 시설을 관리·운영 하고자 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의3에 따라 동의를 받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 \*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주차장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 12. 31.자로 종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주차환경 개선사업 및 주차 질서 유지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주민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 **2024년도 예산안 ▶ 원안가결**
  - \*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예산안을 의회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하기 위한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 \*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하기 위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민선8기 구정목표 달성을 위한 행정 기반을 마련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 기구를 조정하고자 함.
- **2024년~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 보고완료**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2024년~2028년까지 5년간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울산광역시장과 협의하기 전에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기 위함.

- **2023년 자문기관 운영 현황 보고의 건 ▶ 보고완료**

- \*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우리 구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자문기관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문기관의 운영 현황 및 정비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기 위함.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타 구·군 특별휴가 기준을 참고하여 실정에 맞게 경조사 휴가 및 장기재직휴가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상위 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북구체육회에 대한 지원 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고,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 보고완료**

-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쳐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일시 : 2023. 8. 7.

발의자 : 박정환 의원(대표발의) 외 8명

제안이유 : 상위 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부재하는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 원안가결 - 2023. 9. 12. 제2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발의일시 : 2023. 8. 7.

발의자 : 김상태 의원(대표발의) 외 8명

제안이유 : 「행정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만 나이 정착과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자치법규 내 나이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 원안가결 - 2023. 9. 12. 제2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일시 : 2023. 11. 1.

발의자 : 손옥선 의원(대표발의) 외 8명

제안이유 :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제도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의원이 구금상태이거나, 출석정지 등의 징계로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의정활동비 등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 원안가결 - 2023. 12. 13.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발의일시 : 2023. 11. 1.

발의자 : 박정환 의원(대표발의) 외 8명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제9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 ▶ 원안가결 - 2023. 12. 13.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발의일시 : 2023. 11. 1.

발의자 : 김상태 의원(대표발의) 외 8명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에 따라, 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과 인사운영의 자율성·실효성을 높이고자 관계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 원안가결 - 2023. 12. 13.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일시 : 2023. 11. 8.

발의자 : 김상태 의원(대표발의) 외 4명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산불방지 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의 생명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 ▶ 원안가결 - 2023. 12. 13.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울산광역시 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일시 : 2023. 11. 8.

발의자 : 김정희 의원(대표발의) 외 8명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자연친화적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 원안가결 - 2023. 12. 13.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일시 : 2023. 11. 20.

발의자 : 박재완 의원(대표발의) 외 8명

제안이유 : 상위 법령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하고자 함.

- ▶ 원안가결 - 2023. 12. 21.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일시 : 2023. 11. 20.

발의자 : 손옥선 의원(대표발의) 외 8명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 원안가결 - 2023. 12. 21.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① 목 적

2023년 구정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투명한 주민 위주의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 ② 근 거

- 「지방자치법」 제49조 ~ 제51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 제53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③ 감사기간 : 2023. 11. 21. ~ 2023. 11. 29.(9일간)

### ④ 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현황

감사대상부서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계	103	8	95
공 통 사 항	0	0	0
기 획 재 정 국 (행정복지센터 포함)	15	1	14
행 정 지 원 국	26	3	23
복 지 환 경 국	19	1	18
안 전 건 설 국	21	1	20
보 건 소	6	1	5
문 화 예 술 회 관	4	0	4
시 설 관 리 공 단	7	1	6
구 립 도 서 관	5	0	5
의 회 사 무 과	0	0	0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구분	주요질의사항
 <p><b>이선경</b> 부의장</p>	<p><b>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 당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약사항의 정상적 추진을 위하여 접근가능성과 미래지향성을 가지고 실현이 불가한 공약은 과감하게 실천계획 변경 및 대책 등을 마련하는 한편, 실질적인 공약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국·시비 예산확보, 중앙 정부와의 협조 체제 강화 등 구민이 공약 이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공약사업의 내실을 도모해 주길 바람.</li> </ul> <p><b>공공체육시설 관리위탁 철저 및 사유화 방지 대책 수립</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체육시설은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일부 동호회의 독점과 텃세로 사유화 논란이 되고 있음. 유료 전환 및 투명한 예약시스템 구축 등으로 진정한 의미의 공공시설로 돌아올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길 바람.</li> </ul>
 <p><b>박정환</b> 의회운영위원장</p>	<p><b>진장지구 쇼핑단지 활성화 사업 적극적 민·관 협력 당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장지구 발전협의회와 민·관 협력을 통해 상생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수립과 적극적 협업 당부드림.</li> </ul> <p><b>강동 카페로드 활성화 민간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필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동권 관광활성화를 위해 민간과 협력체제 구축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민간의 주도적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 내는 한편, 강동 지역 볼거리·이벤트 지속적 확충, 인근 상권과 연계한 다양한 행사, 테마 발굴 등으로 강동 카페로드 브랜드화에 앞장서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람.</li> </ul>
 <p><b>박재완</b> 행정자치위원장</p>	<p><b>송정복합문화센터 이용률 제고 방안 수립 및 주차장 개방 검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송정복합문화센터 주민 이용률 제고 방안 수립 및 인근 상가 및 주민 등을 위하여 주차장 무료개방을 검토해 주기 바람.</li> </ul> <p><b>관광지 접근성 향상 대책 마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객 유입을 위해서는 볼거리, 먹거리, 숙박, 접근성 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나, 우리 구 관광지는 대부분 접근성이 좋지 않음. 광역시 및 부서 간 업무협조 등을 통하여, 대중교통 연계한 교통편의 제공, 시티투어 노선 확대 등 적극적 의견 개진과 함께 접근성 향상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람.</li> </ul>
 <p><b>조문경</b> 복지건설위원장</p>	<p><b>공중화장실 환경개선 사업 적극 추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장실은 한 국가나 도시의 문화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인 만큼, 쾌적하고 깨끗한 복구 이미지가 제고 될 수 있도록 관내 공중화장실 전반에 대하여 청결 유지는 물론, 내·외관 개보수 등 환경개선이 절실함. 특히, 강동지역은 해양 관광지로 그 역할이 중요하므로 단편적인 개보수가 아닌 이미지 개선을 위한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li> </ul> <p><b>산하천 관리 및 정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동 관광지역 중심부에 있는 산하천의 불법 경작, 무단 적치 등으로 경관훼손, 주민안전을 침해하고 있음. 하천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 및 관리가 요구되고, 향후 강동 롯데리조트 등의 관광단지 이미지에 맞는 산하천 개발 정비가 필요하므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준비하기 바람.</li> </ul>

구분	주요질의사항
 <p>김상태 의원</p>	<p><b>천곡교 확장 검토</b></p> <p>- 천곡교는 차량 통행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편도 1차선으로 출퇴근 시간대는 상습 정체구역으로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함. 특히, 94년 준공 이후 공동주택 신축에 따라 교통량이 대폭 증가되었고,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향후에도 수요 증가가 예상되므로 교량 확장 등의 대비책을 조속히 강구 바람.</p> <p><b>KTX-이음 정차역 유치 전략적 추진</b></p> <p>- KTX-이음 정차역 유치 타당성 용역 결과, 타당성 있음으로 분석된 만큼 민·관·전문가 추진위원회 구성, 주민서명운동 등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울산시, 울주군 등과 연대한 유치전략을 마련, 관련부서 간 협조체계 구축으로 정차역 유치를 위한 체계적, 전략적 활동을 하여 주기 바람.</p>
 <p>강진희 의원</p>	<p><b>정자항 활성화 대책 마련</b></p> <p>-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 수산물 판매량 감소 등으로 어민 수입이 감소되고 있음. 수산물 소비촉진 방안과 더불어 근본적으로 정자항 시설물 미관 개선 및 볼거리 조성 등 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정자항 활성화 대책 마련이 요구됨.</p> <p><b>달빛어린이병원 지정 노력</b></p> <p>- 북구는 어린이 수가 많음에도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된 곳이 없음. 어린이의 야간, 공휴일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한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이 절실하므로 소아과 의사 부족 등의 어려운 상황이지만 관내 소아과 등 의료 관계자와의 공감대 형성으로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함.</p>
 <p>손옥선 의원</p>	<p><b>고향사랑기부제 성공적 안착 및 제도 활성화 노력</b></p> <p>- 답례품 발굴 및 기부자가 공감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금의 구체적 활용방안을 정립하여 홍보하는 방안, 타 지자체 성공 사례 벤치마킹, 기부자 사후관리 등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가 단순 1회성 기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방문 유도로 관광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주길 바람.</p> <p><b>양정·염포 지역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요청</b></p> <p>- 청소년시설 인프라 불균형과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하여 양정·염포 지역 내 유휴 공간 등을 활용하는 방안 및 장기적으로는 건립을 적극적으로 검토바람.</p>
 <p>임채오 의원</p>	<p><b>기산빌라 ~ 염포운동장 도로개설 추진</b></p> <p>- 염포 지역의 고질적 교통체증 해소 및 소방차 진입로 확보를 위한 기산빌라 ~ 염포운동장 간 배면도로 개설을 조속히 추진, 열악한 교통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해결 바람.</p> <p><b>불법 정치(정당)현수막 단속 철저</b></p> <p>- 정치(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울산시에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고, 시비보조금으로 정치(정당)현수막 지정계시대를 설치, 이 외의 계침은 불법이므로 지정계시대 외의 장소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정당현수막에 대해서는 단속을 철저히 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 바람.</p>

## 사과농장 일손 돕기 봉사활동



울산북구의회가 지역 농가에서 정기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며 보람찬 시간을 보냈다.

북구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9월 12일 북구 상안동에 위치한 ‘애플팜’ 사과농장을 찾아 봉사활동에 나섰다.

북구의회는 ‘봉사하고 술선수범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매분기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참가자들은 다소 무더운 날씨에도 과수원 곳곳을 누비면서 사과를 따고 선별해 나르는 등 수확에 힘을 보탰다.

김정희 북구의회 의장은 “작으나마 도움의 손길을 드릴 수 있는 곳을 찾아 지속적으로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 추석 앞 복지시설 위문

울산북구의회가 ‘추석맞이 복지시설 방문활동’으로 북구지역 복지시설을 찾아 온정을 나눴다.

김정희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9월 20일 클로버장애인단기보호시설과 호계 느티나무지역아동센터를 연이어 찾아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운영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와 함께 시설별로 쌀, 라면, 휴지와 물티슈 등의 생필품과 A4용지 등을 격려물품으로 각각 전했다.

이번 격려 방문은 북구의회가 매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진행하는 명절맞이 복지시설 위문활동의 하나다.



## 행정사무감사 대비 특강 개최



울산북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해 특강을 개최했다.

북구의회는 11월 1일 의회 다목적실에서 의원 및 직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나라살림연구소 이성현 기획실장을 강사로 초빙해 ‘행정사무감사 대비 교육’을 진행했다.

이 실장은 강연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자료 수집과 분석 및 사례연구를 비롯해 감사 및 예산안 심의 기법 노하우 등을 안내했다.

김정희 의장은 “내실 있는 감사로 집행기관에게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교육”이라면서 “의정 역량을 강화해 주민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의사사·북청문과 ‘청소년 모의의회’

울산북구의회가 11월 11일 본회의장에서 (사)의회를 사랑하는사람들(의사사) 울산북구지회 주관으로 ‘청소년 모의의회’를 열었다.

행사를 위해 북구청소년문화의집으로부터 연암중, 화봉중, 무룡고등학교 등의 학생 20여명을 추천 받아 모의의회를 진행했다.

청소년들은 북구의회의 회의 형식으로 모의의회를 진행하면서 이날 안건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청소년 위원 필수 등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한 뒤 치열한 토론 끝에 표결로 가결했다.

김정희 의장 등 북구의회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직접 청소년들의 발언과 안건 진행 상황 등을 지켜보며 박수를 보냈다.



## 연암·화봉·송정동 거리 환경정화



울산북구의회가 11월 30일 4분기 정기 자원봉사 활동으로 연암동과 화봉동, 송정동 동해남부선 폐선 부지 일원 보행로에서 환경 정화에 나섰다.

북구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 약 20명이 참가해 폐철도 옆 보행로의 크고 작은 쓰레기를 주워 담고, 잡초 등을 제거하며 보행환경도 개선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봉사하고 솔선수범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북구의회가 매분기 진행하는 자원봉사 활동의 하나다.

김정희 의장은 “쾌적한 보행 환경을 위해 뜻을 모아 거리 정화 활동을 펼쳤다”면서 “구민 편의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2023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울산북구의회가 2023년도에도 적십자 특별회비 나눔 행렬에 참가했다.

북구의회는 12월 7일 의장실에서 김정희 의장을 비롯한 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들과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울산지사 채종성 회장 등 적십자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북구의회는 인도주의 사업의 근간이 되고 있는 적십자회비 모금 운동에 매년 동참하고 있다.

김정희 북구의회 의장은 “적십자회비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적십자의 인도주의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성금”이라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으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결 의 안

발언의원 : 김상태 의원

발언일시 : 제213회 임시회(2023. 9. 12.)

발언요지 :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

##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투기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본의 폭주를 규탄하며 일본 정부가 사고원전의 원자로를 완전히 폐쇄해서 오염수 발생을 막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와 주변국, 일본 어민들, 일본 국민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023년 8월 24일 오후 1시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반문명적이고 반인류적이고 반환경적인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는 미래 세대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또 행복할 권리를 침탈하는 환경범죄로 기록될 것입니다.

국민의 85%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것을 반대하고 일본 어민과 일본 국민들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후쿠시마 원전 문제의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고 원전의 원자로를 완전히 폐쇄해야 추가로 오염수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만, 일본이 아직도 중심에 있는 핵연료의 잔해를 꺼내는 방법조차 마련하지 못했고, 또 빗물과 지하수로 오염수가 계속 발생하는 것을 막을 방법조차 역시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30년 동안 방류한다는 계획은 아무 의미가 없으며, 이후로도 계속 오염수가 생기기 때문에 해양투기는 30년이 지나도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는 바다환경 생태계와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수산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이라도 이 사안을 한일 양국 간 중대 의제로 지정하고, 일본과 협의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는 인류에 대한 도발이고, 태평양 연안 국가를 향해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일본은 100년 전 대한민국 영토를 침략한 전범 국가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권리와 재산을, 그리고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범죄라고 합니다.

일본이 과거 자신들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 총과 칼로 전 세계 인류와 국토를 침범하고 살육했던 그 과거, 그 태평양 전쟁을 다시 한 번 환경범죄로 일으키려 하는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이번 일본의 조치를 인류에 대한 환경범죄로 보고 일본을 환경전범 국가로 다시 규정해야 합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모든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한 런던협약에 정면 위배됩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저터널은 협약에 인용된 그 밖의 인공 해양구조물을 통한 폐기물 투기를 금지한 런던의정서에도 마찬가지로 위반되는 것입니다.

1993년 일본은 러시아 해군이 블라디보스토크 근해에 핵물질을 버린다는 사실을 확인 후 도쿄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고, 국제법으로 문제를 삼아 중단을 시켰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나서서 일본의 명백한 국제법 위반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오는 10월 런던 협약,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이 문제를 중점 논의해 바른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 바다환경 생태계와 수산업을 위협하는 일본의 환경범죄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국제 협약 위반으로 제소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강화 및 방사능 오염 피해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국회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어업 재해로 인정하여 피해 지원 기금 근거를 마련하고 그 기금조성을 위해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 결 의 안

발언의원 : 박재완 의원

발언일시 : 제214회 임시회(2023. 10. 11.)

발언요지 :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

###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 공식화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즉각 '동해'로 수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2월 동해상에서의 한미일 군사훈련 당시, 훈련 해역을 '동해'가 아닌 '일본해'로 표기하였다. 이에 우리 군은 미군 측에 '일본해' 표기 수정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지난 8월 '일본해' 표기 입장을 공식화했다.

'동해'의 '일본해' 표기는 일제강점기 시기인 1929년 국제수리기구(IHO)에서 부당하게 결정된 것으로,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 '동해'로 단독표기 또는 '동해와 일본해'로 병행 사용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4년 미국 버지니아주의회가 공립 교과서에 동해 병기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프랑스 최대 일간지인 '르몽드'가 발행한 2015년판 '세계대지도책'에 '동해'가 '일본해'와 함께 병기되는 등 성과를 거두어왔다.

그러나 미국이 우리 영해상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을 하며, 공식적으로 '일본해'로 통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심각한 주권 침해이며, 동맹국으로서도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 특히, '동해'의 '일본해' 표기는 '동해'에 있는 독도의 영유권 분쟁으로까지 번질 수 있어 이대로 좌시하고만 있을 수 없다. 왜곡된 '일본해'의 명칭을 '동해'로 바로 잡는 것은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에 따른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한미일 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22만 북구 구민을 대표하여 미국 국방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겠다는 공식 입장에 대해 다시 한 번 엄중 규탄 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미국 국방부가 한미일 군사훈련 해역을 '일본해'로 표기한 것을 즉각 수정하고, '동해' 표기 문제 해결을 위해 당사국 간의 대화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동해' 표기의 역사적 당위성을 알려 '동해' 표기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 결 의 안

발언의원 : 박재완 의원

발언일시 : 제215회 정례회(2023. 11. 13)

발언요지 : KTX-이음 북울산역 유치 결의안

### KTX-이음 북울산역 유치 결의안

울산광역시 북구는 북구 주민의 오랜 염원인 KTX-이음의 북울산역 유치를 희망한다.

인구 22만여 명의 울산광역시 북구는 호계매곡지구와 송정지구 등 대규모 택지 조성으로 최근 5년간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으며,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매곡·모

둘화·중산·이화일반산업단지 등에서 10만이 넘는 종사자가 생활하는 활력이 넘치는 지역이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중산·천곡지구 개발까지 완료되면, 인구 유입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광역시 북구는 세계 굴지의 기업인 현대자동차를 배

후로 자동차 도시로의 위상을 떨치고 있으며, 전기차 산업으로의 전환에 따른 관련 산업 고용 증가 및 투자 증대도 기대된다. 또한 강동해변, 무룡산, 천마산 편백숲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대규모 관광 투자유치와 관광산업 활성화가 기대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하지만, 울산 북부권 발전계획 수립조차 없을 정도로 북구는 울산광역시의 대규모 인프라 구축 우선순위에서 번번이 밀려났었다.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의 수도권 교통편의를 일부 책임졌던 울산공항조차 운행 편수 감소에 이어 지역 기반 항공사인 '하이에어'의 '항공운항 효력 정지'로 지역주민의 교통 불편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에 우리 북구는 철도를 중심으로 항공, 도로, 물류, 산업, 관광, 유통, 주거 등을 아우르는 발전을 꾀하고자 광역전철 연장 운영을 이끌어 내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빠르면 2024년 말, 부산 부전역에서 청량리역까지 운행하는 KTX-이음을 완전 개통할 계획이다. KTX-이음이 개통되면 부산 부전에서 서울 청량리까지 2시간 50분 만에 갈 수 있게 된다. 이 노선 중 부산에서 울산에 이르는 중앙선과 동해선 65.7km 구간이 겹침에 따라, 관련 기초단체의 정차역 유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울산광역시 북구가 실시한 '북울산역 KTX-이음 정차역 유치 타당성 조사 용역'에 따르면, 북울산역의 KTX-이음 정차시 2030년 북울산역 이용객은 일일 3,272명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북울산역에 철도 시설 등이 이미 갖춰져 있어 별도의 건설비용조차 필요치 않아 경제성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TX-이음의 북울산역 정차는 울산을 남북으로 단절시킨 창평동 일원 그린벨트 해제와 함께 역세권 개발로 인한 북울산의 눈부신 발전을 이끄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울산 북구가 울산~경주~포항을 잇는 해오름 동맹의 핵심 지역이자, 밑으로는 울산·경남·부산으로 이어지는 메가시티의 요충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우리 북구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천재일우'로, 그 어느 때보다 북구의 치밀한 전략과 의지, 그리고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現) 대응은 실망스럽기만 하다.

이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KTX-이음의 북울산역 유치에 집행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라며, 22만 북구 구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울산광역시 북구는 민·관·전문가 TF팀을 빠르게 구성하여 KTX-이음 정차역이 북울산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사활을 걸고 추진하라.

하나, 울산광역시는 KTX-이음 정차역이 북울산 발전의 단초가 될 수 있도록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주민 교통 불편 해소를 최우선에 두고 북울산역 정차를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국토교통부는 울산 북구의 성장 가능성, 접근성, 확장성 등을 눈여겨보아 KTX-이음의 북울산역 정차가 경주-포항을 잇는 해오름 동맹과 부-울-경 메가시티의 핵심지역이 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정책적 배려를 해줄 것을 22만 북구 주민의 염원을 담아 간곡히 건의한다.



## 결 의 안

발언의원 : 박재완 의원

발언일시 : 제215회 정례회(2023. 12. 13.)

발언요지 :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전액 삭감 규탄 및 편성 촉구 결의안

#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전액 삭감 규탄 및 편성 촉구 결의안

정부와 울산광역시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전액 삭감을 철회하고 합당한 예산을 편성하라.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으로 지방정부 길들이기에 나서고 있다. 내년 당초예산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하며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절망에 빠트렸다. 울산광역시도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년 울산광역시 당초예산에 지역사랑상품권(울산페이)의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이대로라면 내년에는 울산페이 사용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울산페이는 울산 시민 만 14세 이상 2명 중 1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69,800여 소상공인 중 93%가 넘는 65,000여 개 업체가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을 정도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올해는 국비와 시비를 합쳐 323억 원의 예산으로 총 4,400억 원의 울산페이를 발행했는데, 올해 6월 울산시의회 천미경 의원의 서면질문에 따르면 경제 효과는 6,160억 원으로 예산 대비 무려 1,900%, 취업 효과는 7,627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22년 9월 울산시의회 권태호 의원의 서면질문 답변서를 보면 울산 페이의 주요 사용처는 슈퍼와 마트가 31.3%, 일반음식점이 27.2%, 카페·제과점이 12.6%로, 70% 이상이 자영업자가 집중된 골목상권 위주로 결재됐다. 이처럼 울산페이를 비롯한 지역사랑상품권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을 주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역에 도움 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 “국가가 현금 살포식으로 보조금 주듯이 전방위로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지역 균형발전과 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

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부산광역시와 광주광역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비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을 각각 500억 원과 435억 원 편성하며 지역화폐 발급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울산광역시는 2021년 5,081억 원, 2022년 4,896억 원, 2023년 4,400억 원으로 해마다 울산페이 발행 규모를 축소하더니 급기야 내년에는 울산페이를 전면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울산광역시는 과연 누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정부와 울산광역시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전액 삭감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적극 편성하라.

하나, 국회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부활한 7,053억 원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의결로 통과시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반영하라.

하나, 울산광역시는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



# 결 의 안

발언의원 : 이선경 의원  
발언일시 : 제215회 정례회(2023. 12. 21.)  
발언요지 : '메가시티 서울', 서울 광역화 반대 결의안

## ‘메가시티 서울’, 서울 광역화 반대 결의안

근래 정치권에서는 경기지역 일부를 서울에 편입하는 서울 광역화 구상인 ‘메가시티 서울’을 주장하며, 김포시 편입을 넘어 구리시, 과천시, 고양시까지 ‘메가시티 서울’ 논의에 끌어들이고 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단지 이슈화를 위해 불러일으킨 서울 광역화 졸속 논의가 장차 울산에 포함한 수도권 외 지자체의 지방소멸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정부·여당의 행위는 이 속담이나 다름없다.

윤석열 정부의 6대 국정목표 중 하나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이며, 지난 11월에는 역대 정부 최초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메가시티 서울’을 주장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외치는 구호와는 너무나도 다른 행동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서울이 과도하게 비대화되며 지방의 인구를 흡수하고 있다. 2023년 10월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4.8%가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한다. 서울과 수도권 인구의 밀도가 높아질수록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주택·일자리 문제가 심화되고 출생률도 급격히 낮아진다. 인구를 빼앗긴 지방 또한 기존의 경쟁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일자리 감소, 정주여건 악화로 인해 다시 인구가 유출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출생률, 초고령화, 지방소멸로 지방을 넘어 국가 존립마저 위협받는 시점이다.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명,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18개가 소멸 위험지역이며 소멸고위험지역은 2047년 157개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 확대는 정부가 말한 국토균형 발전의 비전과는 전혀 들어맞지 않는다. 정부와 지자체가 초집중하여 지방 살리기에 매진해야 할 이때 ‘메가시티 서울’은 시대 역행적 발상이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불가능하다.

지금은 정부가 ‘메가시티 서울’에 동조할 때가 아니라 지방

역량이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기이다. ‘메가시티’는 본래 지방 도시간 지역 경제권·생활권을 형성하고 이로서 얻을 수 있는 사회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정책이다. 현재 제기되는 ‘메가시티 서울’은 인근 도시의 일방적인 서울로의 흡수에 불과한데다 기대 효과도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 ‘메가시티’는 본래 의도대로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지방도시 간 네트워크 형성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안은 현 정부의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도 광역자치단체가 제출한 ‘초광역권 발전계획’ 등으로 이미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정부는 조속히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대해 반대 입장을 확실히 하고 이런 소모적이고 무의미한 논의를 한시라도 빨리 종결시켜야 한다. 무심코 던진 ‘메가시티 서울’이라는 돌에 ‘지방’이라는 개구리는 생존이 위태로워진다.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의미는 국민을 위한 것이며 그 국민에는 서울만이 아닌 지방의 국민 또한 포함된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이에 울산 북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여당은 지방의 인구나 자원을 흡수하고 지역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메가시티 서울’ 구상을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소멸 대응정책으로서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 계획과 ‘해오름동맹’ 등 지역 경제동맹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을 수립하고 적극 이행하라.



## 구정질문

질문의원 : 강진희 의원

질문일시 : 제213회 임시회(2023. 8. 29.)

질문요지 : 명촌동 행정복지센터 신설과 관련하여

### 명촌동 행정복지센터 신설과 관련하여

효문동의 인구 2만 9천여 명 중 1만 6천여 명이 명촌과 진장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효문동행정복지센터가 같은 행정동이라고는 하지만 도로 폭이 넓은 7호국도로 단절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같은 동민이라는 공동체적 의식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효문동 행정복지센터의 출장소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는 명촌문화센터는 각종 서류 발급이나 민원대처에 있어 진장, 명촌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담아내기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동안도 '이렇게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데 동사무소가 없냐?'며,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민원이 많았습니다. 이에 명촌지역의 각 아파트 대표들이 모여서 '명촌동 행정복지센터 신설 주민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그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실로 지난해 4월 4일, 명촌동 행정복지센터 신설 주민추진위원회가 주관하여 진장, 명촌지역주민 4,478명이 서명한 청원안이 복구의회 심의를 통과하여 복구청으로 이송된 바 있습니다.

이후 6월 1일 실시된 전국지방동시선거에서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복구지역 출마 모든 후보들이 명촌동 행정복지센터 신설을 현수막으로 주민들께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취임한 지 1년이 훨씬 지난 이 시점이면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되고도 남을 시간임에도 가시적 성과가 안 보여 주민추진위를 비롯해 많은 주민들이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Q1)** 박천동 구청장께서는 지난 지방 선거에 출마하며 명촌동 행정복지센터 신설을 선거공약으로 약속한 것은 분명합니까?

**A)**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복구청장선거 출마시 '행정복지센터 신설 분동 검토'를 공약하였습니다. 이는 저의 선거공보 9페이지를 보시면 확인 가능하며, 현재 '행정복지센터 신설 분동 검토' 공약 추진을 위해 효문동 실태조사, 분동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Q2)** 주민들이 명촌동 행정복지센터 신설을 요구했지만 사실상은 명촌문화센터의 내부시설 조정을 통해 빠른 시한 내 개청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는 부지매입과 건축 등의 예산도 절감하고 시한도 앞당겨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다른 신설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A)** '22년 3월 명촌동 행정복지센터 신설과 관련하여 의회 청원서가 접수된 이후 명촌동 행정복지센터 신설 추진위원회와 세 차례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때마다 행정동 신설은 대규모 행정적·재정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복구 주민들간 심각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의견 수렴, 인구 유입 가능성 분석, 공무원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러한 제반 사항이 충족될 시 행정동 신설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표명하였습니다. 행정동 신설 요건이 충족될 경우 동 청사 신축, 명촌문화센터 리모델링 방법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Q3)** 취임한 지 1년도 더 지났는데 지금까지 추진경과를 일자, 내용, 예산, 행정복지센터 추진과 관련한 행정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A)** 복구청장 취임 직후 공약 이행을 위해 '진장동, 명촌동 행정복지센터 신설, 분동 검토'를 공약 과제로 확정하고, 명촌동 행정복지센터 신설 추진위원회와 구청장실에서 면담을 가지며 행정서류 발급 제한 문제, 각종 민원의 신속한 해결 요구 등 명촌동 주민들의 주요 불편·요구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명촌문화센터에서 신규 인감 등록을 제외한 모든 행정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각종 민원 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행정 6급 인력을 배치하여 명촌문화센터의 기능을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철저하고, 성공적인 공약 실천을 위하여 23년

상반기 진장·명촌지역 인구, 산업, 경제 등 각종 분야의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효문동 지역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간담회, 동 자생단체 회의시 행정동 신설에 대한 의견 청취 등 효문동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Q4) 명촌동 행정복지센터 신설과 관련해 남아있는 절차는 어떤 것이 있는지와, 이를 추진하는 데 따른 소요기간을 어떻게 예정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최종 개청 예정일자를 답변 바랍니다.**

**A) 명촌동 행정복지센터 신설은 대규모 행정적·재정적 비용이 발생하고, 북구 지역간, 주민간 심각한 갈등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현재 최대한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한 진장·명촌 행정구역 분석 결과를 구성조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 추진 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 구정질문

질문의원 : 박재완 의원

질문일시 : 제213회 임시회(2023. 9. 12.)

질문요지 : 인구소멸에 대한 북구의 대응 방안에 관하여

## 인구소멸에 대한 북구의 대응 방안에 관하여

지난해 말 산업연구원 발표한 지방소멸 위험도 조사에서 우리 구는 인구감소 소멸 예방지역으로 소멸 우려지역인 동구와 소멸 선제대응지역인 중구보다는 양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는 과연 안심할 수 있는 지역일까요?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21만 8천 6백여 명이었던 인구가 지난달 말 21만 7천 5백여 명으로 천 명 이상 줄었습니다. 지난 3개월 새 한 달에 3~4백 명씩 인구가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의 인구가 이렇게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통 인구소멸의 가장 큰 원인으로 '저출산'을 꼽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2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구정책은 점차 '제로섬 게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는 늘지 않고 수도권 등 살기 좋은 곳으로만 인구가 점점 더 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교육, 일자리, 문화·의료 인프라 구축 등 타 지자체로부터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Q1) 과대·과밀학급 해결을 위해 교육청과 어떤 노력을 하셨으며,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그동안의 추진 경과와 실질적인 성과를 중심으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제가 취임한 이후, 우리 구에서는 신규 학교 설립과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수시로 교육청에 건의하고 답변 요구를 해왔습니다. 올해는 새로 취임한 신임 교육감에게도 과밀학급 및 과대학교 문제 해결을 위해 신설 중인 제2 약수초와 제2 효문초등학교가 예정대로 정상 개교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송정지구 내 고등학교 신설에 대한 주민요구를 전달하였습니다. 중산초 과대 문제는 2025년도 제2 약수초 신설로 해소될 것으로 예측되며, 2025년도 제2 효문초 신설로 울동지구 학교문제 또한 해소될 것입니다. 농소중학교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증·개축을 추진 중에 있고, 농소중학교 사업완료 후 (구)호계중학교에 호계고 학급 증설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답변에 따르면, 교육부 기준 학급당 28명 이상의 과밀학급은 학급 증설 및 학생 분산 배치 등으로 2026**

년에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향후 신설 요인 발생 시, 신규 건립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재완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우리 구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하여 과대·과밀 문제해소와 교육 환경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Q2)**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우리 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 실행 연도, 실행 방안, 예산 등이 담긴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A)** 우리 구에서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협력업체의 산업 전환을 촉진하여 기존의 고용을 유지하면서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산업정책과 일자리 정책의 핵심으로 하여 울산시와 공조하여 다음과 같이 미래차 전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0일 울산은 미래 모빌리티 핵심인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되었으며 8월 24일 울산시와 미래차 핵심 부품 소재업체인 나노팀은 투자 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신규 인력 채용 시 울산시민을 최우선으로 고용하고, 직원의 울산 주소 이전도 적극 권장기로 했습니다. 이번 투자로 지역 내 200여명의 신규 고용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9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현대차 전기차 울산공장을 첨단투자지구로 지정·고시하였습니다. 첨단투자지구로 지정된 울산 전기차 공장은 68만5800㎡규모로 총 2조2879억원이 투자돼 2025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번 투자로 고용규모는 약 2,000여명정도 예상됩니다. 또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부품사 기술전환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 미래 자동차 부품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 대응하고 있으며, 고용안정 선제대응패키지 지원사업으로 2022년부터 자동차부품산업 이직자, 전직자, 퇴직자를 대상으로 11개사 17명에게 9천 4백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였고 2023년 현재 9개사 27명에게 1억 6,2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으로 전기자동차 정비인력양성, 자동차시트 봉제사업, 자동차 튜닝 사업 등을 2013년부터 시행하여 총사업비 32억 1,100만원을 투입하여 교육 485명, 수료 422명, 취

업 332명을 구인·구직 매칭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아울러 북구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관광·유통·쇼핑·서비스 등 부가가치가 높고 여성과 청년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신(新)산업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이고 생동감 있는 북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Q3)**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해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는지 추진경과를 상세히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한 앞으로의 계획과 구청장님의 역할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제시해 주십시오.

**A)** 북구청장 취임 직후 공약 이행을 위해 '진장동, 명촌동 행정복지센터 신설, 분동 검토'를 공약 과제로 확정하고, 명촌동 행정복지센터 신설 추진위원회와 구청장실에서 면담을 가지며 행정서류 발급 제한 문제, 각종 민원의 신속한 해결 요구 등 명촌동 주민들의 주요 불편·요구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명촌문화센터에서 신규 인감 등록을 제외한 모든 행정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각종 민원 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행정 6급 인력을 배치하여 명촌문화센터의 기능을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철저하고, 성공적인 공약 실천을 위하여 23년 상반기 진장·명촌지역 인구, 산업, 경제 등 각종 분야의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효문동 지역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간담회, 동 자생단체 회의를 행정동 신설에 대한 의견 청취 등 효문동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Q4)** 명촌동 행정복지센터 신설과 관련해 남아있는 절차는 어떤 것이 있는지와, 이를 추진하는 데 따른 소요기간을 어떻게 예정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최종 개청 예정일자를 답변 바랍니다.

**A)** 울산의료원은 2020년 코로나 시대에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방역체계의 확립과 공공의료체계의 강화라는 목적에서 추진되었습니다. 울산시에서는 2021년 공공의료원이 없는 광주와 함께 예타면제를 추진하였으나 불발되었으며, 이후 시(市)에서 보건복지부를 통해 기획재정부로 타당성 재조사를 신청하여, 2022년 1월부터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1년 4개월의 검토결과,

울산의료원은 편익 대비 비용 B/C가 0.65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전문가 평가결과 0.486으로 사업시행이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은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市)에서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추진방향을 재설정하여 울산 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

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향후 시(市)의 대응방향에 맞추어 주민들이 열망하는 울산의료원이 해당부지에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저 또한 시장님과 국회의원님,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서면질문

질문의원 : 손옥선 의원

질문일시 : 2023. 12. 11.

질문요지 :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계획에 관하여

###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계획에 관하여

청소년문화의 집은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청소년에게 건전한 직업관 형성과 진로 설계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의 올바른 여가 활동과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설립·운영되는 공공시설입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제10조제1호다목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문화의 집이 법적 의무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재정 부담 등의 이유로 동별로 청소년문화의 집을 설치·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각 지자체에서는 권역별로라도 설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북구에는 청소년 문화시설로 연암동에 '청소년 문화의 집', 천곡동에 '꿈에마루', 산하동에 '몽글몽글'이 운영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중산동에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양정·염포권에는 청소년 문화시설이 전무하며, 교통편까지 불편해 양정·염포권 청소년들은 사실상 청소년 문화시설의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Q1)**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기준과 지역별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기준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지역별 우선순위는 기본적으로 청소년 수나 비율이 높은 곳을 우선 순위로 고려하고 있으나 문화공간이 부족하여 소외된 지역도 여건마련이 될 경우 시설확보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동별 청소년 수 자료 참조) 그간 북구 청소년 문화의집 시설 확보는 2014년에 북구 중간지역인 연암동에 최초 건립하였고, 이후 공공시설 내 공간 일부를 활용하여 분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립진행중인 청소년 시설은 이화지역에 도 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제2청소년문화의 집인 "이화정 청소년창작센터"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Q2)** 그동안 양정·염포권에는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을 계획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A)**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서 국·시비 지원 없이는 자체 재원이 부족하고 행정상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 지역별, 동별 모든 인프라를 확충하기는 힘든 실정입니다. 향후 국·시비가 확보되는 공모사업이 있다면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을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Q3)** 앞으로 양정·염포권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건립할 계획이 있는지와 만약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건립 계획이 없다면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A)** 청소년문화의집은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상황에 재정 및 제반 여건 등 고려시 추가 건립이 어려운 실정으로 정해진 건립 계획은 없습니다. 청소년 전용시설이 없는 양정 염포지역은 우리 구가 확보하고 있는 동주민센터, 생활문화센터, 소금포역사관 등 공공시설을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동의 경우 생활문화센터는 매일 10~15명의 아동·청소년이 1층 다목적공간 및 3층 동아리방과 음악실, 미디어실 등을 부담 없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염포동의 경우 염포 양정도서관과 소금나루에 연 400여명, 소금포역사관은 연 8,000여명의 청소년이 시설을 찾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구가 만들어 높은 행정시설을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4)** 양정·염포권에는 빈집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 빈집들을 리모델링해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로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A)** 빈집의 경우 대부분 입지가 좋지 않고 규모가 작으며 상대적으로 가격은 높은 경우가 많아 행정적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중앙정부의 빈집활용 정책 등을 살펴보고 청소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시설확보에 앞서 양정·염포지역 청소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원하는 바가 어떤 것인지 파악하고 우선 지역 내 시설을 활용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참조자료 : 동별 청소년수 및 비율

(단위 : 명, % / 2023. 11월 말 현재)

구분	북구	농소 1동	농소 2동	농소 3동	강동동	효문동	송정동	양정동	염포동
청소년 수	37,645	6,382	7,613	8,701	2,401	3,752	6,182	1,318	1,296
비율	100	17	20.2	23.1	6.4	10	16.4	3.5	3.4



## 5분 자유발언

발언의원 : 임채오 의원

발언일시 : 제213회 임시회(2023. 8. 29.)

발언요지 : 울산쇠부리소리, 문화도시 울산 원동력 되길

### 울산쇠부리소리, 문화도시 울산 원동력 되길

2022년 12월 울산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제4차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 '문화도시 울산'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울산시가 지역의 역사와 본질이 얽힌 문화자원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문화적 접근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는 분명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전략 중 하나는 국보 제285호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울산시 무형문화재 제7호 '울산쇠부리소리'와 같은 지역색이 강한 문화자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가 2022년 한 해 동안 73만 명이 다녀가며 2014년 대비 70% 정도 방문객 수가 늘어났습니다. 방문객 수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까지 톡톡히 누린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문화자원으로 성공한 사례에서 착안한다면, 울

산 고유의 문화적 보석인 반구대 암각화와 울산쇠부리소리는 울산을 문화 안식처로 변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큼니다. "자발적 산업근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자 "철기에 관한 노동요가 매우 드물다"는 점에서 희소성을 지닌 문화자원인 '울산쇠부리소리'의 국가무형문화재 등재는 지역의 문화자원이 가진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고유성을 널리 알려 시민들의 인식 속에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더욱더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1947년 백범 김구 선생이 쓰신 <나의 소원>에는 우리 민족이 남에게 의지하지 않는 완전한 자주독립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화도시 복구, 문화행복이 넘치는 복구가 되길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

발언의원 : 박정환 의원

발언일시 : 제213회 임시회(2023. 8. 29.)

발언요지 : 자동차 도시, '울산 복구'의 위상 정립을 위한 제언

### 자동차 도시, '울산 복구'의 위상 정립을 위한 제언

울산 복구는 지난 반세기 동안 자동차 도시로서의 위상을 떨쳐왔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산업이 내연기관에서 전기 자동차 및 ECO 운송시스템으로 급속히 변화하며,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고뇌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위기와 성장의 기회가 공존하는 지금, 자동차 산업의 대전환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3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업종 간 융합(Convergence)에 따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급부상하고 있는 만큼, 산업의 경계를 넘어 기업과 전문가들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융합공간'을 조성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구 내 공공기관과 기술연구소, 대학이 참여하는 '상생협력 기업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대학과 연구기관의 우수한 기술지원은 물론, 우수한 인재를 매칭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우수 인재들이 지역에 머무를 수 있도록 각종 혜택을 지원하고 청년들이 살기 좋은 정주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이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도입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장 변화에 한발 앞서 정책을 추진하고 예산을 지원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복구의 자동차 산업은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새로운 기로에 서 있습니다. 융합공간 조성, 인재 매칭 시스템 구축, 정책 및 예산 지원 등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한다면, 자동차 도시로서의 울산 복구의 위상을 확고히 정립해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강자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 5분 자유발언

발언의원 : 강진희 의원  
발언일시 : 제213회 임시회(2023. 9. 12)  
발언요지 : 매곡배드민턴장 철거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 매곡배드민턴장 철거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매곡배드민턴장은 민선 2기 때부터 흠바닥에 비닐천막을 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2011년 경 일부 바닥과 지주대를 보강하였으나 2014년 초 폭설로 인해 천장골조가 무너지는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매곡배드민턴동호회와 북구배드민턴연합회는 안전한 배드민턴장을 조속히 지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고, 이에 북구청도 5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하고 기존 자리에 건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매곡배드민턴장이 언론에 나오고,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하니 담당과에서는 얼마나 골치가 아플까 이해도 갑니다. 하지만, 철거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선은 매곡배드민턴장 부지에 대해서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하천부지에서 근린생활 시설로 변경하여 양성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셔야 합니다.

둘째는 북구청이 해당 건물에 대해 새로운 배드민턴장이 지어질 때까지 스스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있

습니다. 북구청이 스스로 구청 시설에 부과하는 모순이 있기는 하지만 새로 지어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부과한다면 '시설 철거'라는 엄청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매곡배드민턴장을 철거한다면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현 박천동 구청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2014년 초 폭설로 시설이 붕괴된 이후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 윤종오 구청장이 예산을 확보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음 구청장으로 취임한 박천동 구청장께서 매곡배드민턴장을 가설건축물로 인허가를 받아 건축하고 개장식 때 차적으로 자랑하며 박수까지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시 취임한 박구청장께서 이 건물이 불법이라고 폐쇄한 상태이고 철거까지 강행한다면, 본인이 추진한 행정행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박천동 구청장은 매곡배드민턴장 철거를 심사숙고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5분 자유발언

발언의원 : 이선경 의원  
발언일시 : 제213회 임시회(2023. 9. 12)  
발언요지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8월 24일 오후 1시경 일본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을 개시했습니다.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를 차후 30년간 방류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원전 폐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하루 약 100여 톤의 오염수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방류 기간이 4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오염수에 여전히 방사성 물질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오염수가 정화 장치인 알프스(ALPS) 처리를 거친다고 하지만 그린피스에 따르면 그 안에는 삼중수소뿐만 아니라 다른 방사성 핵종도 잔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연간 수산물 소비 1인당 54.66kg으로 일본보다도 많아 오염수 방출로 인한 악영향에 민감한 조건입니다. 우리 북구는 약 18.1km의 해안선을 동쪽으로 끼고 있고 참가자미, 돌미역 등 지역특산물을 보유하며 연간 어획량은 3,744톤, 어가인구 2,120명 외에도 수많은 관련업계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이미 정자활어직매장의 판매량은 기

존의 70~80%가 감소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북구 차원에서도 어민과 수산업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방안과 구민 건강을 위한 실제적 지원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첫째, 안전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지역수산물 홍보 등 지역경제 피해발생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재해 구호기금 조성을 차근차근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일본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화를 강화하고 소규모 어가와 수산물가공업체에 대한 방사능 검사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오염수로 인한 수산물 가격하락, 생산액 감소, 관광객 및 방문객 감소 등 지역경제 피해 발생 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외양간을 잘 관리하면 소를 잃는 과오를 범하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

발언의원 : 박재완 의원

발언일시 : 제213회 임시회(2023. 9. 12)

발언요지 :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요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로 나라가 시끌시끌합니다. 그런데, 홍범도 장군 대신 세우겠다고 거론되는 사람이 일제에 협력해 우리나라 독립군을 토벌했던 '간도특설대'에 장교로 근무한 '백선엽 장군'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그릇된 역사인식은 '일제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이라는 해괴망칙한 해법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전범 기업을 대신해 한일기본조약으로 청구권 자금의 수혜를 받은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출연한 기금으로 만든 제3자 재단에서 배상금을 대납하는 방식을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9일, 미국방부는 동해상에서 한미일 연합훈련을 실시하며 훈련 장소를 '동해' 대신 '일본해'라고 표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에 '동해'는 '일본해'가 아니라고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어야 하지만, 어디에서도 그런 말은 들려오지 않습니다. 영토수호는 대통령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그 책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어찌 한 나라

의 대통령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5일 아침 6시에는 시민 1만9천여 명이 모금해 만든 일본군 위안부 추모시설 '기억의 터'가 서울시 주도로 철거됐습니다. '기억의 터' 설계자로 참여한 임옥상씨의 성추행 이력을 문제 삼아, 구체적인 계획 없이 '기억의 터'를 기습 철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륙과 해양을 잇는 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끊임없이 약탈과 침략을 받아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농부가 팽이와 낫을 들고, 아낙네들은 돌을 던지며 이 땅과 이 바다를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선조들이 지켜온 이 땅의 역사를 왜곡하고 지우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부와 지자체의 주도로 말입니다. 역사를 올바르게 기억하고 지키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어야 합니다. 아울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역사 왜곡과 역사 지우기를 당장 멈출 것을 촉구합니다.



## 5분 자유발언

발언의원 : 조문경 의원

발언일시 : 제214회 임시회(2023. 10. 11)

발언요지 : 강동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바랍니다.

### 강동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바랍니다.

'강동관광단지 조성사업'은 2009년 11월 산하동 일대를 8개 지구의 관광단지로 지정하여 민간투자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관광단지 지정 이후 14년째, 8개 지구 어느 한 곳도 마무리된 곳 없이 중단과 재개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업방식이 민간투자사업이라는 이유로 사업시행자인 복구청은 언제까지 뒷짐만 지고 있을 겁니까!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둘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강동을 투자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예정된 도로 노선과 사업비가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정치권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등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야 합니다. 더불어, 도로 완공에 따라 늘어난 교통수요에 맞춰 대중교통과 주차장 여건도 사전에 검토해 주십시오.

둘째, 앵커사업인 롯데리조트를 비롯해 추진될 사업들이 각종 규제나 행정적 절차로 인해 중단 혹은 지연되지 않도록 대처해주시길 바랍니다. 강동관광단지 투자기업과 원활한 공조를 이뤄 규제에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적 절차는 지원하여 빠른 시일 내 가시적인 성과를 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간과 시너지를 낼 지자체 차원의 지역특성화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정자'라는 강동의 고유자산을 활용하여 도시이미지를 확립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낼 정자도시재생사업을 재추진하는 등 다양한 지역특성화 사업을 발굴·추진하여 주십시오.

박천동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적 역량을 발휘해 주길 당부 드립니다.



## 5분 자유발언

발언의원 : 조문경 의원

발언일시 : 제214회 임시회(2023. 10. 11)

발언요지 : 강동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바랍니다.

### 강동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바랍니다.

‘강동관광단지 조성사업’은 2009년 11월 산하동 일대를 8개 지구의 관광단지로 지정하여 민간투자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관광단지 지정 이후 14년째, 8개 지구 어느 한 곳도 마무리된 곳 없이 중단과 재개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업방식이 민간투자사업이라는 이유로 사업시행자인 복구청은 언제까지 뒷짐만 지고 있을 겁니까!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둘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강동을 투자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예정된 도로 노선과 사업비가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정치권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등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야 합니다. 더불어, 도로 완공에 따라 늘어난 교통수요에 맞춰 대중교통과 주차장 여건도 사전에 검토해 주십시오.

둘째, 앵커사업인 롯데리조트를 비롯해 추진될 사업들이 각종 규제나 행정적 절차로 인해 중단 혹은 지연되지 않도록 대처해주시길 바랍니다. 강동관광단지 투자기업과 원활한 공조를 이뤄 규제에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적 절차는 지원하여 빠른 시일 내 가시적인 성과를 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간과 시너지를 낼 지자체 차원의 지역특성화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정자’라는 강동의 고유자산을 활용하여 도시이미지를 확립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낼 정자도시재생사업을 재추진하는 등 다양한 지역특성화 사업을 발굴·추진하여 주십시오.

박천동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적 역량을 발휘해 주길 당부 드립니다.



## 5분 자유발언

발언의원 : 박재완 의원

발언일시 : 제214회 임시회(2023. 10. 11)

발언요지 : 산불 예방과 진화를 위한 울산 복구 대응체계 개선을 기대하며

### 산불 예방과 진화를 위한 울산 복구 대응체계 개선을 기대하며

최근 전 세계가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작년 3월 4일부터 13일까지 무려 9일간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일원에 대형 산불이 발생해 산림 등 2만 923ha(헥타르)를 태웠습니다. 우리 구는 행정면적 대비 산림면적 비율인 ‘산림률’이 70.5%로 울산 5개 구·군 중 최고입니다. 산불은 철저한 대비가 제일 중요하며, 발생했다면 조기 진화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박천동 구청장님과 집행기관에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언을 드리려 합니다.

첫째, 최첨단 ICT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산불 예방 및 감시설비를 고도화한 산불 예방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시오.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된 센서 카메라가 24시간 화재나 산불을 감시하고 감지 시, 원하는 사용자에게 경고음을 보내는 등의 기술이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예산이 들더라도 최신 ICT 기술을 탑재한 산불예방시스템을 구축해 대형 산불을 예방해야 합니다.

둘째, 임도 확충과 전문화된 진화 인력 확보를 통해 지상 진화 체계 강화에 힘써 주십시오. 임도는 야간산불 진화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임도는 선진국의 14분의 1에 불과합니다. 산불 예방을 위해 임도 조성을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산불 예방 관련 주민 홍보를 확대하여 인재로 인한 산불을 예방해 주십시오. 우리 복구의 산불 발생 원인은 고춧대 소각과 용접 등 부주의에 의한 것이 많습니다. 산림청은 산불 예방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우리 구도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 홍보를 강화해 주십시오.

앞서 얘기한 세 가지 제언 외에도 산불 진화 인력, 장비, 지원시스템을 모두 갖춘 ‘복구 산불대응센터’의 건립을 울산시와 함께 추진하고, 산림 체질을 수목의 나뭇잎이나 줄기가 직접 화염에 닿지 않으면 잘 연소하지 않는 ‘내화수종’으로 개선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 5분 자유발언

발언의원 : 박재완 의원

발언일시 : 제214회 임시회(2023. 10. 13)

발언요지 : KTX-이음, 반드시 북울산역에 유치되어야 합니다.

### KTX-이음, 반드시 북울산역에 유치되어야 합니다.

북구는 인구 22만여 명으로 중구와 동구의 인구를 넘어섰지만, 인구 증가 대비 기반 시설 확충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지리적으로 중구와 동구 사이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뛰어나고 7번 국도와 오토밸리로·이예로가 있어 울산 어느 지역으로도 단시간 내 이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경주시와도 인접해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살려, 우리 북구가 북울산역 KTX-이음 정차역 유치에 나섰습니다.

북울산역 KTX-이음 정차역 유치는 역세권 개발을 명목으로 창평지역 그린벨트 해제의 단초가 될 것이며, 우리 구에 부족한 기반시설 부지 확보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의료원 유치와 외곽순환도로 개설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된다면, 우리 구는 명실 공히 울산시의 거점지역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울산시는 정차역 유치 과열을 우려하며 ‘울산에 유치될 수 있도록 힘을 합치자’라고만 입장표명을 하며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KTX-이음의 역간 거리는 안동~영천이 86.6km로 제일 길며 풍기~영주가 12.4km로 제일 짧습니다. 울산에서 정차역 유치에 뛰어난 북울산역에서 태화강역이 9.7km, 태화강역에서 남창역이 16.2km로, 지금 상태로 놔둔다면 역간 거리가 짧아 태화강역 한 곳으로 정해지는 건 볼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러나 태화강역은 현재도 교통 체증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데다 도시 중심지에 위치해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하기에도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김두겸 울산시장님께 건의합니다! 울산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보다 거시적인 시각에서 북울산과 남창, 두 지역에 정차역을 추진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가 최소한으로 정차역을 만든다 하나 북울산역과 남창역은 울산에서도 극과 극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북구 발전! 지역주민과 정치권, 지자체가 함께 노력한다면 결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함께 도전하고 이뤄냅시다!



## 5분 자유발언

발언의원 : 박정환 의원

발언일시 : 제215회 제2차 정례회(2023. 11. 20)

발언요지 : 저는 근로자였습니다.

### 저는 근로자였습니다.

제가 회사를 떠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 했을 때 정부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창업지원센터는 큰 힘이자 희망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저는 창업지원센터가 별다른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울산광역시 관내 5개 구·군이 모두 구민을 위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 기관들의 지원대상은 청년에 집중되어 있고 중장년 이상을 대상으로 한 창업 지원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 구는 울산에서 가장 젊은 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젊은 지역이라는 말일 뿐, 청년 창업 지원 대상인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북구 전체 인구의 27%에 불과한 데 비해 40~60대 중장년 인구는 48% 이상을 차지합니다. 100세 인생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은 현재, ‘신중년’이라는 단어로 경력과 노하우를 갖춘 50~60대를 정의하고 있는 시대임에도 이 세대에 대한 지원이 부족해서야 되겠습니까?

현재 있는 지원책들은 대상이 한정적이고 물질적으로도

지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경제 상황이 급격히 변화하고 고령화가 점차 진행되는 현재 구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해서는 신중년 까지 창업지원 대상을 확대해서 그 역량을 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 대상뿐만 아니라 규모도 확대되어야 합니다.

서울은 신중년을 중심으로 한 풀패키지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일부 지자체들은 신중년은 물론 경력단절여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와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도 격변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구민의 새로운 시작을 지원하고 성장 잠재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신중년을 포함해 창업 지원 대상을 더욱 다양화하며 지원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규모 또한 확대해야 합니다. 북구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모두가 자신의 경험과 기술, 역량과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갖추어 주시기 기대합니다.



## 5분 자유발언

발언의원 : 손옥선 의원  
발언일시 : 제215회 제2차 정례회(2023. 11. 20)  
발언요지 :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제언

###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제언

요즘 맨발걷기가 말 그대로 ‘핫(hot)’ 합니다. 세계로 오는 민원의 80~90%가 각 동에 맨발걷기길을 만들어 달라는 내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 지자체에서는 앞다투어 맨발걷기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남구는 태화강 국가정원 내 꽃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걸을 수 있는 특색 있는 황토 맨발길을 조성했으며, 울산지역에 황토길 맨발걷기 붐을 일으킨 중구는 맨발걷기길 조성에서 나아가 ‘황방산 건강관리(웰니스)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황토 산책길 맨발걷기’와 ‘숲속힐링 요가’ 두 가지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최근 동대산 기박산성에서 신흥재까지 1km 구간과 신천공원 송림 산책로 1.3km를 정비해 맨발 산책로를 조성하는 등 맨발걷기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맨발걷기 사업이 주민 건강을 해치지 않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집행기

관에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주민 접근성이 좋은 곳에 맨발걷기길을 조성하여 주십시오. 여러 곳에 많이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주민이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곳에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맨발걷기길이 적재적소에 조성될 수 있도록 각 동별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주십시오.

둘째, 맨발걷기길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 및 관리에 힘써 주십시오.

셋째, 전문화된 맨발걷기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십시오. 잘못된 맨발걷기로 오히려 피로와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맨발걷기지도사’ 양성을 비롯해 올바른 맨발걷기가 정착되도록 주민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북구의 맨발걷기길이 주민의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또 다른 관광자원으로서 자리매김하길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발언의원 : 박재완 의원  
발언일시 : 제215회 제2차 정례회(2023. 11. 20)  
발언요지 : 내로남불, 이제 그만하십시오!

### 내로남불, 이제 그만하십시오!

지난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3박 4일간, 저희 북구의회 의원들은 홋카이도 오도리 공원 등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떠나기 며칠 전, 북구주민회는 북구의회가 집행기관과 함께 연수를 가게 되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소홀히 하게 되고, 집행기관의 거수기 역할로 전락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성명서를 발표하신 북구주민회 회장 안승찬 전 의원님! 2015년 11월 1일부터 3일간, 안승찬 전 의원님을 포함한 진보당 의원님 세 분께서도 북구청 관계자들과 함께 2박 3일간 벤치마킹으로 일본 시마네현을 방문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10여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본인들의 표현대로 그때 안승찬 전 의원님은 집행기관의 거수기 역할로 전락하셨습니까? 그리고 그때 그 연수는 정말로 시급한 것이었습니까? 본인들의 일본 방문은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이고 현

의원들의 일본 벤치마킹은 외위성 활동입니까?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습니다.

울산 북구는 울산 5개 구·군 중 제일 마지막에 출범한 지자체입니다. 북구 주민의 생활을 책임질 미래 먹거리 창출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구 접목 방안을 연구하는 것 또한 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정치적 논음을 하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왜곡하지 마십시오.

우리 의원들은 해야 할 일을 망각하거나 연수목적 뒤로 한 채 그 어떤 부끄러운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시는 정치적 논음으로 내로남불하며 북구의회를 모욕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 5분 자유발언

발언의원 : 이선경 의원

발언일시 : 제215회 제2차 정례회(2023. 11. 20)

발언요지 : 메가 서울! 시대 역행하는 윤석열 정부 이대로 관참은가!

### 메가 서울! 시대 역행하는 윤석열 정부 이대로 관참은가!

최근 정치권에서는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메가시티 서울’이 연일 도마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김포시에 이어 구리시도 서울 편입을 희망한다며 서울 광역화 구상 실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자 윤석열 정부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가시티 서울’은 수도권외의 허울 좋은 말일 뿐 지방소멸이라는 생존이 달린 문제를 걱정하는 우리 지방은 이 움직임을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나라의 수도권 인구 집중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봐도 그 정도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1년 6월 전체 인구의 50.2%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비해 일본은 28%이며, 프랑스는 18.2%, 독일은 7.4%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역대 정부들은 방향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지방혁신도시 선정, 광역경제권 구축과 지역경쟁력 강화 등 지방을 발전시키고 수도권으로 치우쳐 있는 인구와 경제력을 분산하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힘은 단지 정치적 이슈를 만들기 위해 ‘메가시티 서울’을 들고 나왔고 윤석열 정부도 이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비대화의 부정적인 측면은 개의치 않고 6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제시하기까지 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무색하게 하며 정부는 일방적인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지방의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를 일으키고 취약계층 지원사업 축소, 고용 불안과 사회서비스 축소 등 지방을 더 살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의미는 국민을 위한 것이며 그 국민에는 서울만이 아닌 지방의 국민 또한 포함된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5분 자유발언

발언의원 : 박재완 의원

발언일시 : 제215회 제2차 정례회(2023. 12. 13)

발언요지 : 중대재해, 더 이상 손 놓을 수 없습니다

### 중대재해, 더 이상 손 놓을 수 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 유예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만약 이대로 진행된다면 내년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이하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는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기관에 다음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 울산지청과 북구청, 기업이 함께 하는 민관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민관이 실태조사부터 함께 참여해 실효적인 중대재해 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종합적·효율적인 중대재해 예방사업

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둘째, 중대재해 예방 전문 컨설팅을 실시하고 영세중소기업의 안전을 중점 관리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를 앞두고 업종별 매뉴얼 지급, 명확한 지침 수립, 전문인력 및 기술 지원 등 영세중소기업들을 위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자로서 우리 구도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 구가 발주한 공사나 시설의 사용, 공공근로, 청소, 폐기물 처리, 산림복지정비 등의 업무수행 시 위험성 평가와 안전 문화 구축 등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북구가 선제적으로 중대재해 예방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 앞서서 중대재해 제로(ZERO) 지방자치단체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발언의원 : 김상태 의원  
발언일시 : 제215회 제2차 정례회(2023. 12. 13)  
발언요지 : 정당현수막, 주민이 우선입니다

### 정당현수막, 주민이 우선입니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통상적 정당활동 범위의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정당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법 취지와는 달리 정당현수막이 정보나 정책을 전달하는 용도보다는 서로에 대한 비난과 비방의 수단으로 사용되며 국민들에게 정치적 피로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이렇듯 국민들이 겪는 불편함을 감안하여 지난 5월 8일,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하여 전국에 배포하였습니다만, 단속 기준이 모호하고 권고사항에 지나지 않아 현실적인 정비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기관에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각 정당들과의 간담회나 교육을 통해 정당현수막의

인정 범위, 표시방법, 설치방법 등을 안내하고 정당들 스스로가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행자가 현수막에 걸려 넘어지거나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등 교통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강력하게 단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옥외광고물법」 제5조제2항 금지광고물 유형에 '상대방에 대한 비방·혐오'를 추가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에 보장된 정당활동은 보장받아야겠지만, 정당활동이 주민의 안전이나 불편을 담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당활동의 자유와 주민의 생활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치인과 지자체 모두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 5분 자유발언

발언의원 : 조문경 의원  
발언일시 : 제215회 제2차 정례회(2023. 12. 21)  
발언요지 : 탄소중립, 복구의 미래입니다.

### 탄소중립, 복구의 미래입니다.

우리 구는 2023년 5월 18일 「울산광역시 복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선제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여, 어제(12월 20일) 최종보고회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 쉽지 않겠지만, 더 나은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회임을 알기에 저는 오늘 복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 가지 당부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 및 홍보사업 추진에 각별히 신경 써 기후위기에 관한 경각심과 탄소중립 실현의 중요성을 22만 복구민과 공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전에 제가 참석했던 복구청 간부공무원 대상 기후위기 교육은 실생활과 밀접한 사례가 어우러져, 저에게 기후위기를 피부로 와 닿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양질의 교육을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시행한다면, 향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크나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둘째, 모든 부서는 탄소중립 사회 실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각종 사업들이 본 취지에 어긋남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양한 사업들이 기본계획이란 큰 틀 아래에서 막힘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복구청 전 부서가 유기적 협력관계로 예산 확보 등의 문제에 대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는 탄소중립 도시 복구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수립·검토하여,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부담요소들을 사전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자는 "탄소중립 역량이 도시경쟁력을 좌우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구 또한 역량을 발휘하여 잠재된 도시경쟁력을 증명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 5분 자유발언

발언의원 : 박정환 의원  
발언일시 : 제215회 제2차 정례회(2023. 12. 21)  
발언요지 : 문화예술, 복구를 디자인하다

### 문화예술, 복구를 디자인하다

우리 구는 대외적으로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발전의 중심지'라고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를 넘어 '문화예술의 도시'로 복구를 '디자인' 함으로써 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높이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구를 문화예술의 도시로 재탄생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들과 복구청, 구민들이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를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구 지역 특성을 살린 문화예술 활동을 확대해야 합니다. 올해 12월에는 10명의 복구 작가들이 우리 구 명소인 '일곱만디와 12경'을 스탬프 이미지로 제작하였는데, 이것이 좋은 예입니다. 이처럼 지역의 명소, 특징은 물론 일상적 풍경과 예술의 연계가 우리 구의 지역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문화예술 정책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활동들을 많이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술창작소 운영 개선과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술창작소가 주민 누구나 함께 문화예술 체험을 할 수 있고 예술가들은 전문적인 연구와 활동이 가능한 특색 있는 예술 공간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개선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셋째,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을 지향해야 합니다. 먼저 장애인이 문화권을 향유함에 있어 비장애인에 비해 어려움을 겪게 되는 물리적 접근성, 콘텐츠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예술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창작물 우선구매 등 지원방안도 모색해야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산업도시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구를 '살고 싶은 복구', 누구나 찾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5분 자유발언

발언의원 : 박재완 의원  
발언일시 : 제215회 제2차 정례회(2023. 12. 21)  
발언요지 : 경로식당 급식단가 현실화하라

### 경로식당 급식단가 현실화하라

저는 오늘 관내 경로식당의 급식 단가를 현실화할 것을 박천동 구청장님께 강력히 요구합니다.

지난해 5월과 올해 6월, 경상일보에 보도된 울산의 경로식당 실태는 처참합니다. 치솟는 물가에 운영난까지 겪고 있으며, 현재와 같이 밥상 물가가 계속 오를 경우 급식 인원을 줄이는 것 말고는 대책이 없다고 합니다.

경로식당 급식은 어떤 어르신에게는 하루에 딱 한 끼 먹는 소중한 식사일지도 모릅니다. 궁극적으로 계층 간 복지 형평성을 제고하고 어르신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경로식당 급식 단가의 현실화는 당장 필요한 조치입니다. 또한, 단순히 하루 한 끼 식사 제공의 의미를 넘어 건강한 노년을 맞을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 균형 있는 식단 서비스도 지원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오산처럼 종교단체와 연계하여 무료 급식이 없는 공휴일에도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

해야 합니다.

복구와 동구의 60세 이상 노인인구를 비교해 보면 11월 기준, 우리 구가 39,567명, 동구가 38,888명으로 우리 구가 679명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경로식당 운영 관련 예산은 2023년도 기준 시·구비를 합쳐 동구가 6억4천5백여만 원, 복구가 4억4천9백여만 원으로 동구가 2억 원이나 많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담당 부서 공무원들의 정확한 실태 파악을 당부 드립니다.

인간은 누구나 노년을 맞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경로식당 급식비를 현실화하여 어르신들이 행복해지는 한 끼 식사를 제공한다면 우리 구가 구정 목표인 '새희망 미래도시, 명품 복구'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요? 제 간절한 소망이 박천동 구청장님과 집행기관에 잘 전달되어 경로식당에 대한 즉각적인 실태조사와 급식비 인상으로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 2023년도 하반기 포토의정



01



02

- 01 7.14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
- 02 7.25 도서관 자원봉사자 양성과정 수료식
- 03 8.25 구청사 구내식당 증축 기념식



03



04

04 8.27 8개동 연합 동체육회원 체육대회

05 9.4 신규 통장 직무교육

06 9.6 2023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05



06



# 2023년도 하반기 포토의정



07



08

- 07 9.13 국민운동단체 이음한마당
- 08 10.14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박람회
- 09 11.4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교직원체육대회



09



10 11.27 새마을회 사랑의 김장담그기

11 12.1 2023 복구자원봉사대축제

12 12.7 당사어물항 어촌뉴딜 300 준공식





# 2023년도 하반기 포토의정



13



14

13 12.18 북구새마을지도자대회

14 12.21 2023년 북구의회 총무식

15 12.29 2023년 북구청 송년 다과회



15

# | 복구의회 실시간 인터넷방송 서비스 제공 |



## ○ 서비스 개요

- 인터넷에 접속 가능한 모든 주민이 언제 어디서나 PC,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 기기를 이용하여 의회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
- 주민들에게 복구의회 의사 진행과정을 생방송 및 녹화 영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

## ○ 서비스 내용

- 복구의회 임시회 및 정례회 전 일정 생방송
- 복구의회 임시회 및 정례회 전 일정 녹화영상 영구 제공

## ○ 접속경로

복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kgu.ulsan.kr>) → 인터넷방송 메뉴 클릭 → 메인화면 ON-AIR 메뉴 클릭 → 해당일자 본회의 목록 클릭 → 영상화면 내 재생버튼 누르고 시청

### ※ 꼭 찬 화면 시청 방법

- PC : 영상화면 하단의 전체화면 마크 클릭
- 모바일 : 스마트폰 가로로 회전

# 의회 민원상담 안내

우리 의회에서는 주민 소통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위하여 구정 및 의정활동 등에 관하여 주민의 각종 민원사항을 접수받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방법 내용

민원인과 해당 지역구 의원과의 직접 상담 또는 현장방문  
 각종 민원 불편, 애로사항 상담 및 처리, 각종 여론 수렴  
 ※ 의원 부재 시에는 의회사무과(5층)에서 접수  
 전화 : 241-8994      팩스 : 241-8979

농소1·송정동	농소2·농소3동	농소2·농소3동	농소1·송정동	비례대표
의 장	부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의회운영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자치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복지건설위원장
<b>김정희</b>	<b>이선경</b>	<b>박정환</b>	<b>박재완</b>	<b>조문경</b>
의장실 : 241-8900 010-3469-1522	부의장실 : 241-8901 010-8545-0266	사무실 : 241-8902 010-9359-8572	사무실 : 241-8903 010-9697-7139	사무실 : 241-8904 010-5232-4625
농소2·농소3동	강동·효문·양정·염포동	강동·효문·양정·염포동	강동·효문·양정·염포동	
복지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b>김상태</b>	<b>강진희</b>	<b>손옥선</b>	<b>임채오</b>	
사무실 : 241-8907 010-3854-1103	사무실 : 241-8906 010-8610-4748	사무실 : 241-8908 010-7760-6745	사무실 : 241-8905 010-4844-5405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http://council.bukgu.ulsan.kr>

전 화 052) 241-8971~8975  
 F A X 052) 241-8979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연암동)

## 의회방청 및 견학안내



## 북구의회의 주인은 주민 여러분입니다!

북구의회는 주민 여러분께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의회 방청을 희망하시는 주민께서는 간단히 의회사무과에 신청하시면  
회의 진행과정을 생생하게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주민 여러분의 많은 방청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 의회사무과(☎241-89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 주민과 소통하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가 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http://council.bukgu.ulsan.kr>

전 화 052) 241-8971~8976

F A X 052) 241-8979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연암동)

홈페이지 [council.bukgu.ulsan.kr](http://council.bukgu.ulsan.kr)